

# 청소년 마약범죄 5년간 4배 이상 급증...검찰, '사형·무기' 적용

###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304% 급증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증가 검찰, 청소년 공급은 구속 기소...사형·무기 적용

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법정 최고 형인 사형과 무기 등의 가장 처벌조항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검찰청은 4월 30일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마약 유통은

다크웹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돈벌이를 위해 직접 마약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등 강력 범죄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304%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와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10배 이상 빨랐다. 실례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0월 16세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또 창원지검은 지난해 8월 친구의 딸인 15세 청소년에게 졸피뎀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고 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또 채팅 앱으로 만난 15세 청소년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남성과 가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인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일명 '구루밍' 범

죄를 저지른 20대 남성도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는 등 청소년이 직접 마약을 매수·투약·유통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 가장처벌로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사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고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사형과 무기 등의 가장 처벌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구속 기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치료재

활 지원에도 나선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실무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범죄와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력해 중독 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 사회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서울광장서 약자동행 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체험 행사  
가 스마트폰으로 남편과 자녀들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약자동행 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체험 행사에서 한 가족이 임신부 체험을 하고 있다. 뒤에서 어머니

## 술먹고 부부싸움 중 둔기로 아내 머리 때린 5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7시 55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둔기로 부인 50대 B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술을 마신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화끈에 집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선욱기자

## 불법숙박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기존엔 국민신문고·지자체 등 분산...불편 제기

1일부터 모델처럼 개조한 멀티방이나 등록 기준에 미달한 불법 숙박업소를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일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일원화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모텔 등 일반숙박업소와 생활숙박업소는 복지부, 민박업소는 농림부, 관광호텔 및 외국인 도시민박업소(게스트하우스)는 문체부가 담당하는 등 부처가 나뉘어 있다. 불법운영 신고창구도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일반숙박업소의 경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신고 면적을 초과해 운영하는 경우 불법이다.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소도 불법운영 사례로 분류된다. 민박은 사업주가 실거주하지 않거나 상호명이 신고된 이름과 다르면 문제가 된다.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툭파페, 파티룸 등 밀폐된 개별 방에서 침대나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모델처럼 유사 숙박업을 운영하는 변종 멀티방도 불법영업이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



이터 개방' 홈페이지(localdata.go.kr)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